

전남도, 공공요금 동결 요청에 시·군 줄줄이 유예

“도민 부담 완화 최우선 고려해야” 나주·순천 상하수도료 인상 유예 버스·택시업계 한계... 국비 요청 주말 주택·무안공항 활성화 모색

전국적으로 공공요금 인상 자제 검토에 따라 전남도 역시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 시·군에게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일부 시·군의 경우 올해 요금 인상이 예정됐지만 전남도의 이번 요청으로 요금 인상 계획을 유예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1일 도청 서재 필실에서 실국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요금 압박이 큰 상황에서 도민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고려해 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연료비 상승 등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큰 상황”이라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로 어려운 도민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도에서 유류비 증가분의 30%를 재정지원해주는 점을 감안해 가능하면 올리지 않도록 잘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됐던 시·군의 경우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유예했다. 나주시와 순천시의 경우, 상·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1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수도 요금 인상 계획을 유예한다. 조례에 따라 연차적 요금 인상이 이뤄질 계획이 었지만 이번 전남도의 요청으로 요금 인상 시기를 미루기 위해 조례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일찍이 이달 1일자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 나주시의 경우엔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는 변동이 없다.

반면, 전남도내 버스요금과 택시요금의

인상 요구가 현장에선 빗발치는 상황이라는 점은 변수다. 현재 전남도는 경영난에 직면한 버스업계와 택시업계의 요금 인상 요구에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버스 중단 사태를 예방하고 있다. 그러나 한계에 몰린 도내 일부 버스업계는 수억원대 연료비를 체납하며 한계에 몰린 상황이다. 전남도는 대규모 시내버스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재정 지원과 더불어 국비 요청도

고민하고 있다.

또 이날 김 지사는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농촌 ‘주말주택’ 활성화를 비롯해 무안 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에 대비한 해외 관광객 유치·관리 현안도 꼼꼼히 챙길 것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중장기 정책을 발굴하고, 용역 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지금 바로 할 수 있

는 일을 해야 한다”며 “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면 1가구 2주택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활용, 수도권 등 도시민을 대상으로 ‘주말주택’을 장려하면 생활인구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또 “최근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전세기로 입국한 태국 관광객 가운데 일부 이탈자가 있어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순 없으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3월15일부터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관광객의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다”며 “해당 국가 관광객 유치와 관리를 잘 해 무안공항을 활성화하고, 203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챗GPT 열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도청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특강 등을 하고 있는데 업무 활용 못지않게 전남을 검색할 때 좋은 지표가 나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전체 도정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좋은 데이터가 많이 생산되도록 하고, 빅데이터 관리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민주, 헌법개정특위 활동 시작’

1면서 계속 그는 “87년 헌법에선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실현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으나 지금은 새롭고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직면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진국 수준의 헌법을 기본권 확대, 국민주권 강화, 권력구성 원리 확립, 경제·균형의 분권화 등이 반영된 헌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국민이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균형발전, 기후위기 대응 등 여건은 국가적 과제가 된 지

오래”라며 “국민 기본권 측면에서도 생명권, 환경권 등 새 시대 변화에 맞춰 반영할 가치들이 많다. 논의 과정에서 국민 의견도 충분히 경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월까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안을 낼 계획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월 2일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지난달, 여야 추천을 받아 각계 전문가들로 ‘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야 합의를 거치는 대로 머지않아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전국 1위’

63만여 세대 중 58% 가입 연간 최대 40만원 지급

광주시가 전기·수도·가스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탄소포인트제는 최근 2년의 에너지 사용량과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절감하면 연간 최대 4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유도 제도다.

참여 분야는 단독·공동주택 거주자 대상인 개인 부문과 사업자·학교·아파트 단지가 대상인 상업 부문으로 나뉜다. 개인

부문은 연 최대 10만원까지, 상업 부문은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한다.

올해는 감축 실적에 따라 개인과 상업 부문에 인센티브 12억8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입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자치구,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전체 63만여세대 중 58%가 넘는 36만여세대가 가입, 가입률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지난해 8만5000여세대에 10억30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이는 온실가스 9만5296톤을 감축한 것으로, 30년 산 소나무 1444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

광주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차량 2879대를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비사업용 휘발유·경유·LPG 승용·승합(12인승 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감축량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송진남 광주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박상지 기자

전남일보 인스타그램 @jnilbo
 광주사람들 인스타그램 @peopleofgwangju
 스낵뉴스 인스타그램 @hiphot_snacknews

완도에서 오전에 떠나는 초대형 카페리 블루펄 취항

· 취항일시 23년 2월 16일 목요일 완도발 오전9시
· 티켓오픈 23년 2월 16일 (목) ~ 6월 11일 (일)



추속 초대형 카페리 블루펄 취항

블루펄 운항 스케줄

완도발 09:00
제주발 17:10

매일 1왕복
(매주 토요일 휴항)
2시간 40분 소요

정원 877명
차량적재 390대
선적항목
승용차 / 화물차 / 오토바이
자전거 / 수화물



주종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상임고문
송죽레저관광 대표이사

한일고속 대표대리점 HANILEXPRESSGROUP HANILEXPRESSFERRY **송죽레저관광** T. 064.747-8000 F. 064.747-2590 H. 010-6865-7000